

데스크시작



윤 영 기  
사회 부장

김상완(51) 씨는 그때 눈물이 났다고 했다. 특정 휴대전화 소유자만 가능했던 영상 통화 기능을 2015년에 모든 기종 사용자들이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비장애인에게 대수롭지 않은 서비스 확대지만, 김 씨와 같은 처지의 농아인(聾啞人)에게는 예상일이 아니었다. 비로소 맘 놓고 지인들과 수어(手語)로 통화하게 됐다. 문자 메시지로만 의사소통을 해 온 농아인으로서의 신세계가 열린 셈이었다. 그 후 농아인의 명함에는 전화번호와 함께 문자 메시지를 뜻하는 ‘문자’ 외에 영상 통화가 가능하다는 ‘영상’이란 단어가 추가됐다.

하지만 이들의 고충은 지금도 계속되는 ‘진행형’이다. 몸이 아파 응급실에 실려 가더라도 의사에게 아픈 곳을 정확히 알려 줄 수 없다. 광주시 수어통역센터에서 24시간 대기하는 수어 통역자가 동행해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행

그들의 손짓에 담긴 간절함

정 기관에서 간단한 서류 한 통을 떼더라도 통역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한국인 이면서도 외국인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게 이들의 실상이다.

수어 드디어 우리말 되다

농아인은 자신들을 농인(聾人), 비장애인용 청인(聽人·듣는 이)으로 관계를 설정하고 독특한 손언어인 수어를 쓴다. 수어는 우리나라 농아인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언어로, 외국인들은 한국 수어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 언어로 꼽는다고 한다. 지난 2016년 2월 ‘한국 수화언어법’(수어법)이 제정됨으로써 농아인은 당당히 비장애인에게 수어를 쓰도록 요구하고 수어로 말할 수 있게 됐다. 법의 총칙에 그 뜻이 담겨 있다. “이 법은 한국수화 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 수화 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 수화 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골자를 추리면 수어가 국어와 같이 법적인 한국의 언어가 됐다는 얘기다.

최근 국내 최초로 경기도에서 문을 연 한국수어교육원은 수어법을 토대로 설립된 전문 교육 기관이다. 개그맨 신동엽의 형인 경기도 농아인협회장이 산파역을

했다고 한다. 신동엽은 형이 회장을 맡고 있는 이 단체에 3억 원을 기부했다. 9000명에 달하는 광주 지역 농아인에게 수어교육원은 언감생심이다. 그래도 언젠가는 자치 단체와 지역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 준다면 어엿한 수어 전문 교육 기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들에게 교육 기관이 간절한 것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9000여 명의 농아인이 있지만 절반가량은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문맹이라고 한다.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교사가 음성 언어로 교육을 했기 때문이다. 글과 음성 언어로 소통하는 사회의 벽을 절감한 이들은 더욱 고립되고 있다. 우리가 농아인을 좀처럼 길거리에서 만나지 못하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다. 대부분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광주 지역 농아인도 반듯한 일자리를 얻지 못해 막달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실정이다.

5월 첫 희생자도 농아인

단절된 삶을 살아온 광주 지역 농아인이 세상과 소통에 나섰다. 아니 사고(?)를 쳤다. 내년 전국 농아인의 날 행사(7월6일)를 광주에서 치르기로 한 것이다. 연간 운영비가 고작 2300만 원인 한국농아인협회 광주시협회가 전체 행사비 1억 원,

참가 인원 10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행사를 덥석 유치한 것이다. 이들은 광주시에 애걸하다시피 해서 행사비 절반인 5000여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들이 행사를 유지한 것은 5·18을 전국 농아인에게 알리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5월과 농아인을 연관 짓는 데 의문을 품는 이들도 있겠지만, 5·18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이들은 그 맥락을 금방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계엄군에게 학살된 첫 희생자가 바로 농아인 김정철(당시 24) 씨다.

구두를 만들어 팔고 닭아 주며 생계를 잇던 그는 5월18일 시내에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 계엄군 총성도 시위대 함성도 들을 수 없었던 그는 친구와 함께 일하던 중 계엄군에 붙잡혔다. 결국, 그는 광주 시민이자 장애인으로 두 번 죽어야 했다. 농아인이라며 손짓 발짓으로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를 계엄군은 진압봉 등으로 잔혹하게 구타했다. “복심 흉내 낸다”며 더 가혹하게 매질했다. 목숨을 빼앗는 것보다 더 잔인한 연흔 학살이었다.

한 줌 무용담도 이야깃거리로 파는 알팍한 세상에서 농아인은 5월의 첫 희생자를 세상에 내세우지 않고 살았다. 그들이 5월을 통해 세상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제 그들이 내미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penfoot@kwangju.co.kr

은펜칼럼



박 홍 군  
건축사·포유건축 대표

양림의 기록은 50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 양림산이 최초 언급된다. 조선시대 승정원 동부승지를 지낸 양촌(楊村) 정엄(鄭淹, 1528~1580)의 효행을 기린 정려각(旌閭閣)은 지금도 마을에서 볼 수 있다. 1899년에 지어진 이장우 가옥(옛 정냐고 가옥)과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최승효 가옥(옛 최상현 가옥, 1920년대)이 있는 마을 일대는 광주의 명당 터다. 사직공원을 등지고, 광주천을 맞이하며 멀리 무등산을 바라보고 있다.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마을이다.

바로 옆 양림산 자락에는 1904년부터 이곳에 정착하기 시작한 기독교 선교사

양림 역사문화마을의 개발과 보존

들의 흔적이 많다. 학교, 병원, 예배당, 사택 등 근대문화유산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역사문화마을에 ‘양림 역사문화마을 관광지원회사’이라는 것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되었다. 선교사묘지 주변 정비, 건물 보수, 문학공원 조성, 이런 저런 기념관 건축, 주차장 확보, 소방도로 개설 등등 하드웨어 부분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었다. 이 과정에 마을의 주요 공간이나 경관이 훼손되었고, 가치 있는 건물과 길과 필지들이 사라졌다. 새롭게 들어선 개개의 건물은 좋은 디자인이라고 본다고 해도, 이 지역에 어울리는 건물인지는 동의할 수 없다. 또한 큰 길이 생긴 것이 역사문화마을을 좋게 만들었다고 볼 수도 없다. 관광지원화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더 좋은 관광자원들을 훼손하고 말았다.

그 외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등이 진행되었고,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남아 있는 이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사라지고, 사라질 위기에 있다.

2016년부터 새로운 계획이 또 시작되었다. 양림5거리를 중심으로 광주천변에

접해 있는 노후주거 밀집 블록을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그중 일부 지역은 재생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걱정도 많다. 아직 행정을 포함한 전체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민간 영역의 건축물과 공공의 조형물들이 종합적 계획 없이 여기저기 들어서고 있는데, 마을에 대한 건축 가이드라인이 없다. 아직 행정을 포함한 전체적 역량을 많이 보았다. 지금까지 건축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마을에 대한 건축 가이드라인이 없다. 문화재 주변은 ‘심’의’를 거처지만 상세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역사문화마을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고, 어떻게 만들어 갈지 걱정이다.

유네스코는 역사마을 보존 원칙으로 네 가지를 권고하고 있다. 첫째, 필지를 보존한다. 둘째, 길을 보존한다. 셋째, 지형을 건드리지 않는다. 넷째, 주민의 생활 양식을 바꾸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터’무늬를 최대한 지키는 것이며, ‘인간이 그린’ 무늬를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찾는 의미다.

지금까지 역사문화마을인 양림동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네가지 보존 원칙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깊은 사유가 없었다. 사업은 많았으나 역사문화

마을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고, 개발 ‘원칙’을 만들어 내질 못했다. 상황에 따라, 행정 책임자에 따라 다양한 시선으로 이루어 졌다. 그리하다보니 양림동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는 일과 일관성, 지속성에 한계를 많이 보였다. 지금까지 건축, 토목, 조경, 조형물, 간판 등등이 따로따로였다. 전 과정을 입체적이고 세밀히 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선진성 공사체들을 보면 권한을 가진 총괄 건축가가 이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는 그리 할 수 없을가.

역사마을의 새로운 건축 환경은 또 다른 문화의 커를 만드는 행위다. 마을의 미래가 그곳에 있다. 좋은 건축 환경은 역량을 갖춘 행정과 건축주, 마을주민이 함께 한 사용자 그룹, 동참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 이 모든 것을 조율하여 최선의 대안을 찾아내는 건축가에 의해 시작된다.

양림 역사마을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모든 세우고(鋪) 쌓는 일(築)에 입체적·인문적 통찰과 총체적 판단, 정교한 설계와 시공관리가 필요하다. 이게 쌓여야 지속가능한 마을이 된다.

리 민주주의는 다수제이다 보니 소수의 견이나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는 무시되고 네 편, 내 편으로만 나뉜다. 사고도 다양성이나 창의성이 말살된 이분법적 논리에 사로잡힌다.

반면, 합의제 민주주의는 다변화된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조정 협의하며 합의로 이끌어가는 구조다. 정당 체제 역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현재의 거대 양당 구조 중심의 정당 체제가 바뀐다. 그동안 우리 정당은 거대 양당이 독식하며 선거 때만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공약하지만 막상 선거 이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동안 두 정당이 번갈아 집권하고 의회 권력의 다수를 차지하며 적대적 공존 관계를 유지해왔다. 정치는 인물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개선이 우선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인물을 교체해도 낡은 정치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정치는 너무 낡아 침몰 직전이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고장난 채 운행되고 있다. 선거 제도 개편을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는 게 답이다.

社 說

첫 관문 넘은 5·18 특별법 연내 처리해야

5·18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발의 5개월여 만에 5·18 핵심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무엇보다 여야 합의로 의결된 것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진전이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그제 저녁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특별법안’ 등 4건의 5·18 특별법안을 하나로 모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은 특별법안이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드는 것이므로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논의 끝에 소위는 일단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통과된 법안은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 같은 당 최경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 1건 등이다. 이들 법안은 37년이 넘도록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집단 발포 명령과 헬기 사격, 압매

장 등 5·18 핵심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5·18 단체들이 요구해 온 실무위원회 설치 조항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삭제된 것이다. 김동철·최경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조사위 외에도 사무처와 광주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 및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 가운데 조사위와 사무처 설치 조항만 반영됐다.

특별법이 법안소위를 넘어섰지만 갈 길이 멀다.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돼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리를 다짐하고 있는 만큼 관건은 자유한국당의 협조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 통합으로 가는 전제 조건이다. 특별법이 연내 제정돼 내년부터 진상조사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 끝까지 추적 엄벌을

광주·전남 지역에서 2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는 모두 784명이었다. 국세청이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고액 체납 개인·법인 명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광주는 235명, 전남은 293명, 법인은 광주 108곳, 전남 148곳이었다. 전국적으로는 개인은 1만 5027명, 법인은 6376곳으로 총 체납액은 11조 4697억 원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10억 원 이상 체납한 개인은 13명이며, 이중 3명은 50억 원 이상을 내지 않은 상태다. 10억 원 이상 체납 법인은 7곳이었다.

국세청이 체납자 명단과 함께 공개한 고액 체납자 추적 조사 결과 및 적발 사례를 보면 한마디로 가관이다. 20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안 낸 체납자의 고급 아파트를 수색하자 백남준의 대형 비디오아트 등 수억 원 상당의 예술품이 쏟아져 나왔고, 증여세 50억 원을 내지 않고 빌라에 숨어 살던 사채업자

는 세탁기에 10억 원어치 채권 서류와 2200만 원의 현금을 숨겨 뒀다가 적발됐다. 또한 요양원에 숨어 살며 안경지갑에 수표 4억 원을 숨긴 노인 등 악질적인 체납자들도 상당수 있었다.

납세는 신성한 국민의 의무이다. 고액 체납은 월급에서 한 톨도 빠짐없이 세금을 내는 근로자나 서민 등 성실납세자들을 허탈하게 하는 행위이다.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고의성 없는 체납자는 분납 유도나 체납 해소 등의 방안을 강구해 줘야 하겠지만 악질적인 고액 체납은 조세 징수차원을 넘어, 사회정의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전액 징수해야 한다.

특히 재산을 은닉해 놓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질 체납자들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징수함은 물론 출국금지 요청, 민사소송과 형사고발 등을 통해 세금 체납액보다 훨씬 큰 제재가 가해진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당신만 하리요.(중략) 미운 정도 고운 정도 우리 함께 나누며 백년해로합시다.” 트로트 가수인 현철 씨의 ‘백년해로’(百年偕老)라는 제목의 노래 가사다. 백년해로는 부부가 뒤편행생을 사이좋게 지내고 즐겁게 함께 늙어 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골 덕담 중 하나가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다.

지난달 20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91)과 에든버러 필립공(96)이 결혼 70주년을 맞았다. 두 사람은 결혼 70년간 찰스 왕세자, 앤드루 왕자, 에드워드 왕자,

금강석혼식

결혼 70주년을 맞아 8명의 손주, 5명의 증손주를 뒀다. 자녀 넷 중 셋은 이혼했지만, 이 부부의 사랑은 여여 영국 역사상 결혼 70주년을 기념하는 첫 번째 군주가 됐다.

서양에서는 결혼 2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은혼식(銀婚式)이라 한다. 50주년은 금혼식(金婚式), 75주년은 금강석혼식(金剛石婚式)이라 한다. 이들 여왕 부부는 이제 금강석혼식을 남겨 두고 있다.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고 75년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시대가 변하면

것을 말한다. 인도에서는 ‘졸혼’이 아닌 해혼(解婚)이 그리 드물지 않다고 한다.

결혼은 인부가 보유한 가장 오래된 제도이자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오랜 기간 존속할 것으로 보인다. ‘황혼 이혼’이나 ‘졸혼’이 아닌, 엘리자베스 여왕 부부처럼 사이 좋게 살다가 함께 늙으며 금강석혼식을 기다리는 부부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최권원 정치부 부장 cki@

기 고



김 대 현  
위민연구원 원장

민주주의는 갈등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정치가 조정의 역할을 포기한 순간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고 다양한 목소리는 폭력이 되어 견장을 수 없게 된다.

정치는 아무리 미워도, 지겨워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숙명적 관계에 놓여있다. 그런 정치가 개인과 조직 간의 갈등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권력 갈등에만 골몰하고 있다.

정치인은 언어적 폭력, 정당 간의 이합집산, 계파 간의 혈투, 부정부패 등으로 국민의 삶과는 괴리돼 있다. 되레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마치 자기 권력인 양 주인 행세만 하고 있다. 일명 대의 민

주주의의 한계로까지 회자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유독 대한민국이 더 심하다.

무엇이 문제인가. 인물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 인물의 문제라면 계속해서 좋은 사람을 대표자로 뽑으면 해결되는가. 시간을 거슬러 2000년대 초반으로 가보자. 당시 DJ 정부의 ‘젊은 피 수혈’이라는 명목 아래 30대 초반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여야 가릴 것 없이 진출하였다.

그리고 17대부터 19대 국회까지 선거를 통해 교체된 인물이 평균 50%를 넘는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인물교체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는 여전히 국민으로부터 외면과 질타를 받고 있다. 아무리 좋은 인물, 훌륭한 사람도 제도권에 포획된 순간 그 역시 일반 정치인들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제도의 문제인가. 그렇다고 주장하는 쪽은 현재 복유법을 중심으로 한 선진 유럽국가의 정치 행태를 주목한다.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본 그 나라들의 정치는 사회적 갈등, 개인 간의 갈등을 협의와 조정, 그리고 중국에는 합의를 이끌어가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오래전부터 정착되어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권 권력에 대한 특권이 없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정치의 기본인 국민들에 대한 봉사를 전제로 정치가 이루어진다. 일이 너무 많아 힘들어서 그만 두는 정치인도 많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여야 가릴 것 없이 많은 정치인이 독일로 날아가 독일 정치를 공부하고 독일 정치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한다고 되뇌는.

대체 그들 나라의 정치 행태는 어떤지 잠시 보자. 정치는 기본적으로 선거 제도와 정당 체계이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작동하느냐 여부에 따라 정치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갈린다.

먼저,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는 현재 단순 다수제이다. 단 한 표라도 많이 얻는 사람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이다. 51%와 49%의 득표로 51%가 모든 권력을 독차지한다. 낙선한 49%의 민의는 사장된다.

그러니 집권 기간 내내 서로 반목, 질시하며 싸울 수밖에 없다. 한쪽이 죽어야야 큰 한쪽이 살아나는데, 즉 상대의 헛발질이 다른 쪽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또한,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우